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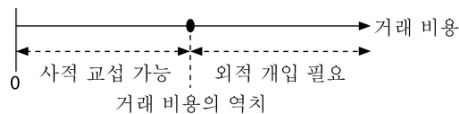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목장의 소가 인근 옥수수 밭의 농작물을 훼손하여 목장 주인과 농부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울타리를 목장 주변에 쳐야 할까 아니면 옥수수 밭 주변에 쳐야 할까?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또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사자들 간의 적절한 타협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정부 당국의 강제적 ② 개입이 필요할까?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학의 이론들은 이들 법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교섭 이론을 들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거래 당사자끼리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적 잉여’를 ⑥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교섭은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경제학에서 ‘외부성’이란 의도성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흡연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과수원이 주변 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츠 교수는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의미로 ‘거래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섭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츠 교수는 거래 비용이 0인 경우, 법에 의지하여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거래 비용은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며, 거래 비용의 수준에 따라 교섭이 가능한지 혹은 교섭이 어려워 다른 대체적 수단이 필요한지가 결정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 비용의 범위를 교섭 영역과 비교섭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거래 비용의 역치가 존재한다. 여기서 ‘거래 비용의 역치’란 교섭이 가능한 거래 비용의 최대치로, 이 역치보다 거래 비용이 적으면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과 같은 강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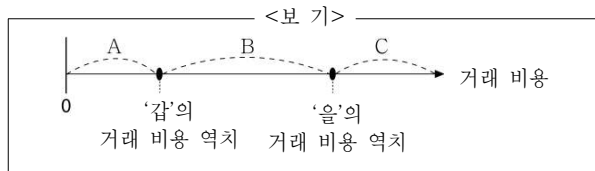
그리고 이 역치는 사람들에게 따라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도 교섭이 성공할 것으로 믿을 것이다. 반면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 역치를 갖는 사람은 보다 낮은 거래 비용 수준에서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그는 보다 많은 상황에서 법의 개입을 © 선호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학의 원리는 법이나 정책의 방향을 ㉔ 설정하고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률가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사적 교섭을 ㉕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구성한다.'라는 '규범적 코츠의 정리'나 '사적 합의의 실패에 의한 손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구성한다.'라는 '규범적 흄스의 정리'는 법률가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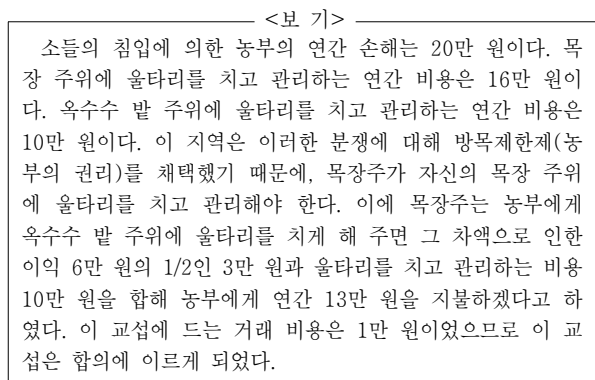
- ① 경제학의 원리는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
- ② 사람에 따라 거래 비용의 역치는 다를 수 있다.
- ③ 거래 비용은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 ④ 외적 개입이 없다면 거래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 ⑤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교섭은 거래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31.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외적 개입 여부’에 대해 ‘갑’과 ‘을’이 동일한 의견을 보일 구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A, C ⑤ B, C

32. <보기>는 ㉠의 문제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다. 위 글을 바탕
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협력적 잉여보다 거래 비용이 더 컸다면 교섭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군.
- ② 법적인 해결보다 교섭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이 지역에서 채택한 방목제한제는 ‘규범적 흡스의 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
- ④ 농부나 목장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규범적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방목제한제’는 목장주가 교섭보다는 법적 강제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겠군.

33. ㉠ ~ ㉣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해 보았다.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국제기구는 국가 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② ㉡ : 개인들의 노력이 합쳐지면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 : 기름 값이 오르면서 소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 ④ ㉣ : 여러 회사 중 우리 회사가 수도권 지역 사업자로 설정되었다.
- ⑤ ㉤ : 이기적인 욕망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산권은 경제적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 침해 받지 않는다.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든 말은 재산을 자기 뜻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권자가 아닌 사람이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려면 반드시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는 재산권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재산권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왜 재산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일까?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만 있는 사회가 있고, 이 사회는 아직 재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아직 거래나 교환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재화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이 생산한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이 보유한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을 생산과 약탈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약탈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갑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을의 재화를 약탈하는 경우에 적거나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약탈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생산하는 쪽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을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의 약탈로부터 자신의 재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에 자원을 배분해야

[A] 할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들의 재화를 생산, 약탈, 방어 세 분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이 사회에서 갑이나 을 중 한 사람은 상대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게 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앞의 경우와 달리 이 사회에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국가에 의해서 그 권한의 행사가 ㉣ 강제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약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약탈이나 방어에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에만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총량은 최대가 된다. 이처럼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재산권 제도를 위해서는 입법 비용, 경찰 비용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이 재산권 제도로 인한 사회의 재화의 증가분보다 작을 경우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사회에 더 효율적이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라든 이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철도 회사가 자기의 철도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라면 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도 마음대로 ㉤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 물질로 인하여 철도 인근의 농민들이 소유한 경작지의 가치는 그만큼 감소하므로 농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서로 다른 두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권익권을 누구에게 ㉥ 부여할 것인가를 법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철도 회사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드는 비용이 100이고, 오염 물질로 인해 농민이 받는 피해는 50이라고 하자. 우선 법이 농민들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철도 회사는 100의 비용을 들여 오염 물질의 배출을 막거나, 농민들이 가진 권익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 권익권의 가격이 100보다 작다면 철도 회사는 권익권을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 경우 권익권은 농민들이 입는 피해인 50보다 크고, 철도 회사의 비용인 100보다 작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농민들이 철도 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면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염 물질로 인한 자신들의 손해인 50보다 큰 금액을 철도 회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반면에 법이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자신이 입는 피해에 해당하는 50보다 작은 가격에는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사려하겠지만, 50보다 큰 가격으로는 사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철도 회사는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는 자신들의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권익권을 판매할 경우에 들여야 하는 비용이 10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권익권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경우와 다른 점은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이 누구의 권익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소득 분배의 결과는 달라진다.

3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권익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②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이어서 무제한적인 속성을 지닌다.
- ③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려 한다.
- ⑤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3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아래의 표는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갑과 을이 상대의 재산권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따라 각자 가지게 되는 재화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 갑과 을이 자신의 자원을 모두 생산에 사용하여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양은 각각 10과 15이다. (단, 사회 구성원은 갑과 을뿐이고,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갑	
		상대의 재산권 존중	상대의 재산권 부인
을	상대의 재산권 존중	갑=10, 을=15 (가)	갑=14, 을=6 (나)
	상대의 재산권 부인	갑=4, 을=17 (다)	갑=7, 을=10 (라)

- ① (가)의 경우, 사회의 재화의 총량이 최대를 이룬 상태이다.
- ② (나)의 경우, 갑의 재화가 14가 된 것은 을의 재화를 약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③ (다)의 경우, 을은 자신의 자원 일부를 약탈에 배분했을 것이다.
- ④ (나)와 (다)의 경우,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결국 (라)로 귀결될 것이다.
- ⑤ (라)를 고려할 때, 재산권 제도 확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10이라면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3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회사는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에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매연 발생 방지 기계가 있으며, 이 기계의 비용은 50이다. (단, 이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A회사와 ○○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 ①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50보다 큰 가격이면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겠군.
- ②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 A회사의 권익권을 사려 하겠군.
- ③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판매한다면 A회사는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해야겠군.
- ④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80의 가격으로는 A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겠군.
- ⑤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권익권을 사고,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하지 않겠군.

34. ㉔의 물음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수 있으므로
- ② 개개인의 권익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 ③ 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 ④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 ⑤ 사회적 비용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35. ㉑~㉔의 사전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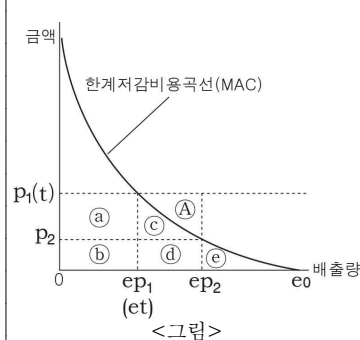
- ① ㉑: 세력이나 기운 따위가 쇠함.
- ② ㉒: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 ③ ㉓: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 ④ 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 ⑤ ㉕: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줌.

◆ 17년 11월 고2 37~41번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요 환경 정책은 직접 규제와 ㉠ 간접 규제 방식이 있다. 직접 규제는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통해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수많은 오염 배출원을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간접 규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등을 이용한 제도가 있다.

먼저 부과금 제도는 종량 수거료, 배출부과금, 제품부과금 등을 이용하는데,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종량 수거료 제도는 오염 물질의 단위당 수거료를 징수하므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하지만 수거료 요율*을 무조건 높이면,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적인 무단 투기가 성행할 수도 있다. 한편 ㉡ 배출부과금이란 기업 등이 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배출부과금으로 인해 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어드는 원리는 <그림>과 같다. 제품 생산자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림>의 '한계저감비용곡선(MAC)'은 생산자가 현재 수준에서 오염 물질 배출량을 1 단위 더 줄이는 데 필요한 추가적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오염

물질 배출량이 ep_2 라면 한계저감비용은 p_2 이고 배출량이 ep_1 이라면 한계저감비용은 p_1 이다. <그림>에서 배출량이 적어질수록 한계저감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배출량을 더 줄이려고 할수록 새로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그래프 각 지점에서의 한계저감비용을 더한 것이므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저감비용을 나타낸다. e_0 에서 ep_2 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㉔이고, ep_2 에서 ep_1 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비용은 ㉔+㉕이다. 그런데 정부가 오염물질 1단위를 배출할 때마다 t 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징수한다면 생산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생산자가 ep_2 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량 ep_2 에 부과금 t 를 곱한 면적인 ㉔+㉕+㉔+㉕+㉔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지불해야 하고, 생산자가 et 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㉔+㉕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원래 배출량이 ep_2 인 생산자가 et 로 오염물질을 줄일 때 ㉔+㉕만큼 저감비용이 들지만 배출부과금은 ㉔+㉕+㉔만큼 줄어든다. 때문에 생산자는 ㉔만큼의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 배출량을 et 의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이처럼 배출부과금 제도는 정책 수단인 부과금과 규제 대상인 오염물질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뛰어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부가 각 생산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정보 획득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산,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제품 단위당 특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제품부과금이라고 한다. 제품부과금은 오염물질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제품 자체에 부과하는 만큼,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배출부과금에 비해 떨어지나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 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이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이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재정적인 보상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 저감시설 보조금제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저감보조금제는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보다 적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배출 상한 기준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대해 1단위당 특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㉔ 저감보조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 사회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고 하고, 오염물질 1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비용을 오염의 한계피해비용이라고 한다. '한계피해비용곡선(MDC)'과 '한계저감비용곡선(MAC)'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염배출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지점에서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결정하고 오염배출량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기업 등은 배출 상한 기준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 배출량을 줄일 때 드는 저감비용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교하여 배출량을 조절하게 된다. 사회적 최적 수준은 앞서 언급한 배출부과금을 결정할 때에도 기준이 된다. 따라서 배출부과금 제도와 저감보조금제는 오염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제도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부과금 제도와는 다르다. 예치금 제도 중 소비자 예치금은 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한 후 그 제품을 반환하면 예치했던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예치금 요율이 너무 낮을 경우 경제적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 * 경제적 유인: 포상금, 과징금 등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경제적인 그 무엇.
- * 요율: 요금의 정도나 비율.

37.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경오염 규제 절차의 문제점을 밝힌 후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한 후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③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 후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환경오염 예방 정책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38. ㉔에 대해 진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과금 제도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배출부과금 제도는 정책 수단과 규제 대상 간의 연계성이 높다.
- ③ 제품부과금 제도는 배출부과금 제도에 비해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이 적게 든다.
- ④ 보조금 제도와 예치금 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 ⑤ 소비자 예치금 제도의 요율이 너무 낮을 경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반환율이 낮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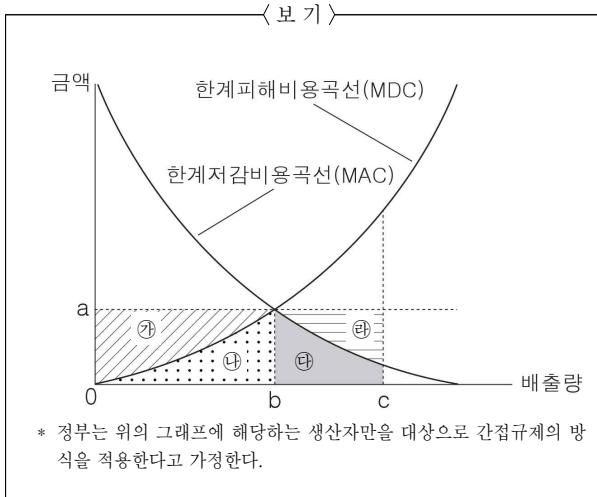
39.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국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물질을 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유리병에 든 ○○ 음료수를 500원에 판매하고 빈 병은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B국은 쓰레기 수거료로 1kg마다 1,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 음료수를 550원에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빈 병을 반납하면 50원을 돌려주고 있다. C국은 공장에 매년 저감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1kg마다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였다.

- ① A국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물질 사용 여부와 유리병 반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많이 소모되었군.
- ② B국이 현재보다 쓰레기 수거료 요율을 올린다면 쓰레기의 불법 배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군.
- ③ B국이 소비자 예치금을 음료의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 음료수의 가격은 A국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겠군.
- ④ C국의 국민들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들겠군.
- ⑤ C국은 저감시설 보조금을 통해 생산자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겠군.

[40 ~ 41] <보기>는 정부가 ㉠ 또는 ㉡을 정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0번과 41번 물음에 답하시오.



40. <보기>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 ② 사회적 피해비용과 한계저감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 ③ 오염 물질 1단위당 부과금에 총 배출량을 곱한 금액이다.
- ④ 오염 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금액이다.
- ⑤ 정부가 지시와 통제를 통해 강제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금액이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오염 물질 배출량을 b로 줄이도록 유도하겠군.
- ②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의 한계저감비용은 b에서보다 c에서 더 높겠군.
- ③ 정부가 부과금을 a로 정한 후 생산자의 오염 물질 배출량이 c라면 생산자는 ㉠+㉡+㉢+㉣ 면적만큼의 배출부과금을 지출하겠군.
- ④ 정부가 부과금을 a로 정한 후 생산자가 오염 물질 배출량을 c에서 b로 줄이려면 생산자는 ㉡ 면적만큼의 저감비용을 지출해야겠군.
- ⑤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이 c이고 지급하는 보조금이 a라면 c에서 b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 때 받는 보조금은 ㉠+㉡ 면적만큼이겠군.

◆ 19년 11월 고1 33~37번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의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신제도와파에서는 기업들의 이러한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거래비용이론이라고 한다.

거래비용이론에서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용을 제외한,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즉 경제 주체가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하여 계약을 하는 과정, 또 계약 후 계약 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인 '시장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② 고려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합병하여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를 내부화하면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조직내거래비용'이라고 한다. 이때 시장거래비용과 조직내거래비용을 합친 것을 '총거래비용'이라고 하며, 기업은 총거래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가정해 보자. 이 기업에서는 시장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만약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거래를 통해 모든 부품을 조달한다면 조직내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시장거래비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거래에서 조달하던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시장거래비용은 감소하지만, 조직내거래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총거래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할 수 있다.

[A]

그렇다면 ㉠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이를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인간적 요인에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다. 먼저, 인간은 거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적 요인으로 인해 거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고,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의 과정 속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에는 자산특수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먼저 자산특수성이란 다양한 거래 주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높은 가치를 갖던 것이 다른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가치

가 하락하는 경우, 자산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산특수성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 **보완**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거래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가 불확실한 거래 상황일수록 거래 주체들은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거래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33. 밑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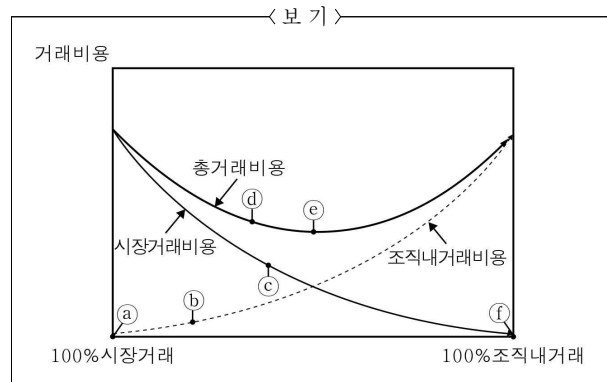
- ① 거래비용의 종류
- ② 총거래비용의 개념
- ③ 시장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
- ④ 기업의 규모가 변화하는 이유
- ⑤ 기업 규모와 생산비용의 관계

34.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자기 장인이 직접 흙을 채취하여 도자기를 빚을 때
- ②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을 탐색할 때
- ③ 가구를 생산하는 사람이 원목 판매자와 재료 값을 흥정할 때
- ④ 소비자가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통신사와 약정서를 작성할 때
- ⑤ 제과 업체가 계약대로 밀가루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35.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조직내거래비용이 ㉠에서 ㉢로 증가했다면 기업은 시장에서 조달했던 부품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겠군.
- ② 시장거래비용이 ㉣에서 ㉦로 감소했다면 기업이 내부 거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겠군.
- ③ ㉠에서 ㉢로 총거래비용이 줄었다면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겠군.
- ④ 총거래비용이 ㉣에서 최소가 된다면 이 지점이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에서는 기업이 모든 부품을 기업 내부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시장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겠군.

36. ㉔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례 1: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A 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 볼트를 특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사례 2: 의료기구 생산 업체인 B 기업은 핵심 부품을 C 기업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과 조달을 위해 두 기업은 계약을 할 때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사례 3: D 기업은 새로 개발한 제품의 원재료를 외국의 E 기업에서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E 기업이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신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 ① A 기업이 조달하는 볼트의 자산특수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B 기업과 C 기업이 계약 조건으로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명시한 것은 거래에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B 기업과 C 기업은 거래하는 핵심 부품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상대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D 기업과 E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군.
- ⑤ E 기업이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D 기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겠군.

37. ㉑ ~ ㉓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
- ② ㉒: 생각하고 헤아려 봄.
- ③ ㉓: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이나 그 됨됨이.
- ④ 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 ⑤ ㉕: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선택에서 출발하여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은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주류의 위치를 지켜 왔다. 신고전파 기업 이론은 이 방법론에 기초하여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주어진 생산 비용과 기술, 수요 조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여 기업의 행동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한 사람의 농부의 행동과, 생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행동을 동일한 것으로 다룬다. 이에 대해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이론이 제시되었다.

㉠ 코즈는 가격에 기초하여 분업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시스템과 권위에 기초하여 계획과 명령이 이루어지는 기업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그는 모든 활동이 시장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어떤 부품을 직접 만들어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매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자. 생산 비용 개념만 고려하는 신고전파 기업 이론에 따르면, 분업에 따른 전문화나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때 자체 생산보다 외부 구매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면 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산 비용이 아닌 ㉡ 거래 비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코즈의 논리이다.

코즈는 거래 비용을 시장 거래에 수반되는 어려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탐색하거나, 서로 가격을 흥정하거나, 교환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하여 계약을 맺거나,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그 내용으로 들었다. 거래 비용이 너무 커서 분업에 따른 이득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자체 조달한다. 다시 말해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위계 조직의 권위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코즈가 제시한 거래 비용 개념은 시장 시스템으로만 경제 현상을 이해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코즈의 설명은 거래 비용의 발생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주류적인 경제학 방법론도 '권위'와 같은 개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월리엄슨은 거래 비용 개념에 입각한 기업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했다. 먼저 '합리성'이라는 가정을 '기회주의'와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가정으로 대체했다. 경제 주체들은 교활하게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지만, 정보의 양이나 정보 처리 능력 등의 이유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즈가 시장 거래라고 뭉뚱그려 생각한 것을 월리엄슨은 현물거래와 계약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계약의 불완전성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계약은 현물거래와 달리 거래의 합의와 이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비책을 계산할 수도 없으며, 언어는 원래 모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 정도를 제삼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에는 빈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행했던 준비, 즉 관계특수적 투자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윌리엄슨은 계약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질수록, 즉 관계특수성이 클수록 계약 후에 상대방이 변화된 상황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관계특수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윌리엄슨은 이를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속박 문제'라고 부르고,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수준의 단순한 계약을 통해서만 사전에 이 문제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과는 다른 복잡한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결할 수 없다면 아예 자체 조달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안전장치가 필요 없는 거래만 존재하는 상황이 신고전파 경제학이 상정하는 세계이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자체 생산만 대안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코즈가 상정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슨의 기업 이론이 거둔 성과 덕분에 거래 비용 경제학이 서서히 경제학 방법론의 주류적 위치를 넘볼 수 있게 되었다.

26. ㉠이 신고전파 기업 이론의 비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가 기업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② 분석해야 할 기업의 행동에는 생산량의 선택밖에 없는가?
- ③ 기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 ④ 왜 어떤 활동은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어떤 활동은 외부에서 일어나는가?
- ⑤ 다수가 참여하는 기업과 한 사람의 생산자 사이에 생산량의 차이는 없는가?

27. ㉡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래량과 반비례 관계이다.
- ② 현물거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계약 제도의 발달을 통해 줄일 수 있다.
- ④ 기업 내부에서 권위의 행사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 ⑤ 거래되는 재화의 시장 가치가 확실할수록 더 커진다.

28. 윌리엄슨의 기업 이론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 ② 경제 주체의 합리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정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나아갔다.
- ③ 현물거래와 자체 생산 이외에도 다양한 계약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 ④ 관계특수성이나 계약의 불완전성이 큰 거래일수록 거래 비용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 ⑤ 시장 거래를 현물거래와 계약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거래 비용의 속성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화력 발전소의 설비는 특정 종류의 석탄에 맞춰 설계되며, 여러 종류의 석탄을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건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한편 탄전(炭田) 근처에 발전소를 건설한 전력 회사는 송전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 근처에 발전소를 세운 전력 회사는 석탄 운반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다음은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화력 발전 전력 회사들의 석탄 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 a 미국 화력 발전에 쓰인 석탄 가운데 15% 정도는 전력 회사가 자체 조달한 것이었다.
- b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은 10%에 못 미쳤고, 1년 이상의 계약 건수 가운데 6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83%였고, 21년 이상의 계약도 34%였다.
- c 특정 탄광에 접한 곳에 발전소를 건설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체 조달 또는 복잡한 장기 계약을 통한 조달이었는데, 이 경우 평균 계약 기간은 35년, 최대 계약 기간은 50년이였다.
- d c에서 복잡한 장기 계약의 경우, 품질과 가격에 관한 조건은 매우 복잡하게 설정하면서도 최소 공급 물량은 단순히 명시했다.

- ① a는 탄광의 직접 경영에 따르는 문제보다 복잡한 장기 계약으로도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 ② b에서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서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속박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에 맺은 것이겠군.
- ③ c는 특정 탄광으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하고 행한 투자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특정 탄광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받고자 한 것이겠군.
- ④ d에서 품질과 가격의 계약 조건이 복잡한 것은, 공급되는 석탄의 품질과 가격에 관련된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삼자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기 때문이겠군.
- ⑤ d에서 최소 공급 물량의 계약 조건이 단순한 것은, 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나 언어의 모호성에 따른 문제가 크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과 같은 제삼자에게 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22 경찰대 1차 26~30번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약 이행으로 당사자들이 얻는 편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순편익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효율적 계약불이행’이라고 한다.

먼저 (가) 사례를 보자. 큰 레스토랑을 개업하려는 A는 한빛조명이란 회사에 2천만 원짜리 샹들리에를 주문하고 한 달 안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이 샹들리에에 대해 2천 5백만 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빛조명이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천 7백만 원이다. 단, 이 사례에 등장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위험 부담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A는 계약 이행을 믿고 개업 전단지를 돌렸다. 이 광고에 2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한빛조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A가 정한 날에 개업하지 못하면 전혀 쓸모없는 지출이 되고 만다. 그 광고비는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행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 신뢰투자라고 부른다.

만약 한빛조명이 계약을 지켜 정해진 날짜까지 샹들리에를 갖다주면 A는 이 계약으로부터 3백만 원에 해당하는 순편익을 얻게 된다. 한편 한빛조명은 이 거래로부터 3백만 원의 이윤을 얻을 것이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의 사회적 순편익은 이 둘을 합친 6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계약 관계에 건축업자 B라는 인물이 끼어들었다. 그는 샹들리에를 급하게 구하고 있어, 최고 2천 8백만 원까지 지불해도 좋으니 구하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A에게 배달될 예정인 샹들리에를 발견하고 2천 4백만 원을 줄 테니 그것을 자신에게 팔라고 한빛조명에 제의했다. 만약 한빛조명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 그 회사의 이윤은 7백만 원으로 늘게 된다. 문제는 계약을 위반할 때 A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에 있다. 그 회사는 계약 위반에서 생기는 추가적인 이윤이 손해 배상액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위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 사례의 경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원래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A가 아닌 B가 그 샹들리에를 공급받을 때 사회적 순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입자의 순편익	한빛조명의 이윤	사회적 순편익
계약 이행 시	A: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계약 불이행 시	A: -200만 원(신뢰투자분) B: 4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그렇다면 계약법에 손해 배상의 규칙을 어떻게 정해 놓을 때 이와 같은 효율적 계약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효율적 계약불이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 시의 구제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이 일어났을 때 다음 두 가지 원칙 중 하나의 구제 방법이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 기대손실의 원칙은 계약을 위반한 측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측에게 만일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누렸을 효용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보장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신뢰투자로 지출한 것은 계약이 이행되어야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 신뢰손실의 원칙은 계약을 위반한 측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측에게 애당초 그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효용 수준과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계약을 위반하는 측인 한빛조명은 요구되는 손해 배상액이 계약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얻게 된 추가적 이윤보다 작으면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 (가) 사례에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한빛조명의 이윤은 4백만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만약 요구되는 손해 배상액이 이보다 작으면 한빛조명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 사례의 경우는 신뢰손실의 원칙이 효율적 계약불이행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기대손실의 원칙하에서는 계약이 이행되는 비효율적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사례만 보고 신뢰손실의 원칙이 언제나 효율적인 계약불이행을 가져다주고, 기대손실의 원칙은 언제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가) 사례의 내용 중 약간만 달리하여 (나) 사례를 상정해 보자. 즉 B가 그 샹들리에의 가치를 2천 4백만 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빛조명에게 2천 3백만 원을 제의한 것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신뢰손실의 원칙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사례에서는 한빛조명이 그 샹들리에를 B에게 팔면 6백만 원의 이윤을 얻는데 이는 계약을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보다 3백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 경우의 사회적 순편익은 B의 순편익 1백만 원에 한빛조명의 이윤 6백만 원을 더한 것에서 A의 신뢰투자 지출액 2백만 원을 빼어 구한 5백만 원이 된다. 그런데 계약 이행 시의 사회적 순편익은 (가)와 마찬가지로 6백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한빛조명은 기대손실의 원칙하에서 손해 배상액이 계약 파기로 증가하는 이익보다 크므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신뢰손실의 원칙하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계약 파기로 증가하는 이익보다 작으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비효율적 결과가 나타난다. 즉 이제는 기대손실의 원칙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이다.

26. 밑줄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논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추론과 해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③ 가설 검증을 통해 기존의 권위 있는 학설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주장과 사례를 비교해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 ⑤ 개념 정의와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질문을 통해 설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7.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혈병 환우 돕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헌혈하는 경우
- ②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편의점을 임대하고 점포세를 받는 경우
- ③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 ④ 조카에게 게임기를 사 주겠다며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라고 당부하는 경우
- ⑤ 방학 동안 해외에 있는 친구의 집을 빌려 쓰기로 하고 비행기표를 미리 구입하는 경우

28. 윗글에서 계약 위반 시의 구제 방법으로 ㉡와 ㉢를 채택했을 때, ‘한빛조명’이 ‘A’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금액은? [3점]

	㉡	㉢
①	5백만 원	2백만 원
②	5백만 원	3백만 원
③	7백만 원	2백만 원
④	7백만 원	3백만 원
⑤	7백만 원	5백만 원

29. (가)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효율적 계약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 ② 계약불이행 시의 사회적 순편익은 B의 순편익과 한빛조명의 이윤을 더한 값이다.
- ③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의 사회적 순편익인 6백만 원보다 계약 불이행 시의 사회적 순편익이 더 크다.
- ④ 계약불이행 시의 한빛조명의 이윤은 B가 제안한 2천 4백만 원에서 상들리에 제작비 1천 7백만 원을 뺀 것이다.
- ⑤ 계약불이행 시 B의 순편익은 상들리에 구입에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2천 8백만 원에 상들리에 구입을 제안한 금액인 2천 4백만 원을 뺀 것이다.

30.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손해 배상 원칙 모두 과도한 신뢰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② 기대손실의 원칙하에서는 계약의 불이행이 효율적인데도 이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어떤 손해 배상의 원칙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④ 신뢰손실의 원칙하에서는 과도한 계약 파기 혹은 과도한 계약 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은 위험 부담에 대해 선호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화폐액의 기대치만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 19년 4월 고3 21~25번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법원이 어떠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다르게 배분되며 불법행위 억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법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원칙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을 찾고자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이다.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한다.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의 기울이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주의 비용은 커지지만,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줄어든다. 주의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을 살펴보자. ㉠ 비책임원칙은 불법행위는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와 달리 ㉡ 과실원칙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이때 과실이란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과실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비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비책임원칙하에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진다.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다. 그리고 법원이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이 정해 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려 한다. ㉢ 결국 엄격책임원칙과 과실원칙은 모두,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 된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이 있다. 먼저 ㉣ 기여과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정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는 항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경우, 우선 과실원칙이 적용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 가해자에게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는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되면 피해자에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기여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과실은 기본적으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되,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이 원칙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주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 비교과실은, 양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큰 쪽이 더 많은 손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비교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책임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여과실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작아도 가해자가 항변을 통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구별된다.

21. 밑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비교과실의 한계
- ② 불법행위의 개념
- ③ 불법행위법의 기능
- ④ 주의 수준에 대한 정의
- ⑤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의 차이점

22.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불법행위의 억제에 효율적이다.
- ② ㉡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③ ㉢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④ ㉠은 ㉡과 달리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 ⑤ ㉢은 ㉡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②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가해자의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④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해서 불법행위의 발생 확률이 최대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영화 속 장면

갑은 을이 제조한 변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는데, 한 달 후 변압기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소화기로 진화하려는 순간 변압기가 폭발하여 갑은 큰 화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을은 변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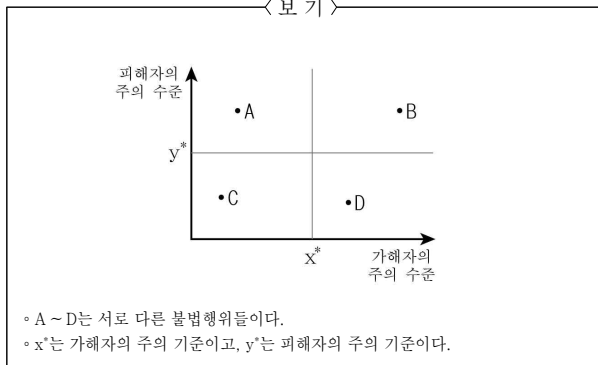
여기서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가해자야. 그리고 변압기 폭발로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에 대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① 학생은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군.
- ② 학생은 갑이 입은 화상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③ 학생은 변압기가 폭발한 것과 관련하여 을의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겠군.
- ④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겠군.
- ⑤ 학생은 을이 변압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① A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y*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② B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켰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 ③ C의 경우 가해자도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y*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 ④ A와 C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⑤ B와 D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 출전: 오정일 외 공저. 《법경제학입문》

- 정답: 21.① 22.⑤ 23.④ 24.⑤ 25.⑤

◆ 18년 10월 고3 16~21번

[16 ~ 2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을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살펴보는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범죄는 여러 형태의 비용을 초래한다.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입히며 사회에 부정적 ㉠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사법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순피해 비용*과 범죄 억제 비용을 합한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 범죄 행위의 빈도와 강도를 나타내는 범죄 수준과, 비용의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는 경제적 한계 가치의 개념을 사용하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범죄 억제 수준을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같아질 때까지 범죄 억제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야 효율적이다. 이 수준을 초과하여 범죄를 억제하게 되면 비효율적이 된다. 그러므로 범죄의 엄격한 억제가 최적 억제 비용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 억제 측면에서 볼 때 형사 제재는 사람들에게 처벌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형사 제재는 행위자의 이익보다 사회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는 의미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즉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가 얻는 이익과 사회가 입는 손해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형사 제재는 사법 당국이 가진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형사 제재의 다양한 기능 중 범죄 억제 기능에 한정해서 최적의 형사 제재 수준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10의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각 행위자는 A 부류의 행위는 50, B 부류의 행위는 4, C 부류의 행위는 7의 이익을 각각 기대할 수 있고 최대 기대 제재는 5라고 하자. 그런데 사법 당국이 A 부류의 행위는 구별할 수 있고, B 부류와 C 부류의 행위는 구별할 수 없다고 하자. 즉 어떤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정당방위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50이 됨을 알지만, 그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4가 될지 7이 될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단, 기대 제재 수준이 기대 이익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당 행위는 억제되며,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크기는 양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A 부류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A 부류가 아닌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B 부류인지 C 부류인지를 모르므로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기대 제재가 4이면, B 부류 행위는 억제될겠지만 C 부류의 행위는 억제되지 않는다. 기대 제재를 최대 기대 제재인 5로 증가시킬 경우, B 부류의 행위와 C 부류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에는 변화가 없으면서도 C 부류의 행위에 대한 제재 비용이 더 ㉢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이다. ㉣ 결국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비용 측면에서 본 최적 기대 제재는 최대 기대 제재인 5가 아니라 B 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최저 기대 제재인 4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0의 제재가 최적 기대 제재가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논의는 제재 확률, 즉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할 확률이 일정 수준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면서 제재 강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재

강도와 아울러 제재 확률이나 행위자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재 강도가 징역 5년이고 제재 확률이 40%인 경우와, 제재 강도가 징역 20년이고 제재 확률이 10%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두 경우 모두 기대 제재는 징역 2년이다. 행위자가 두 제재를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즉 '위험 중립적 행위자'라면 어느 경우든 동일한 범죄 억제를 갖는다. 그런데 제재 확률을 40%에서 10%로 줄임으로써 적발, 체포 비용이 ㉤ 절감되므로, 제재 강도가 높고 제재 확률이 낮은 후자가 효율적인 억제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작은 형량을 더 큰 확률로 받는 것보다 큰 형량을 더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위험 선호적 행위자'라면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억제이다. 위험 선호적 행위자일 때 제재 확률이 40%가 되면, 제재 강도가 징역 20년이고 제재 확률이 10%인 경우와 동일한 억제 효과를 가져 오는 제재 강도는 5년보다 작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제재를 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쉽게 말해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순피해 비용 : 범죄로 인해 사회가 부담하는 피해 비용에서 범죄를 통해 행위자가 얻는 편익을 뺀 값.

* 최대 기대 제재 : 제재로 인해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비효용의 최대치.

16.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로 인한 순피해 비용과 범죄 억제 비용의 합이 범죄의 사회적 총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위험 중립적 행위자에 비해 위험 선호적 행위자는 형량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 ③ 범죄 억제 수준은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동일한 수준이 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 ④ 위험 선호적 행위자에게는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제재 강도를 높이는 것이 범죄 억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⑤ 제재 강도 5년에 제재 확률 40%인 제재보다 제재 강도 20년에 제재 확률 10%인 제재가 위험 중립적 행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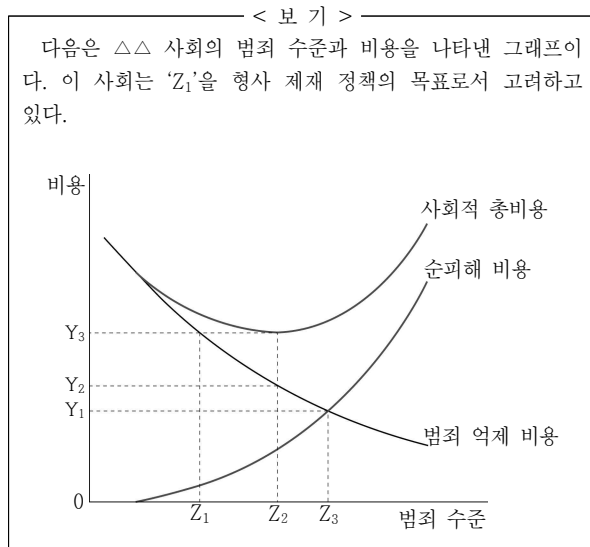
1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 당국은 A 부류의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사법 당국은 최대 기대 제재가 B 부류의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③ 사법 당국은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서도 C 부류의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④ 사법 당국이 B 부류의 행위와 C 부류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면 최적 기대 제재는 4보다 커질 것이다.
- ⑤ 사법 당국이 최대 기대 제재를 통해 범죄를 억제하려 할 경우 최적 범죄 억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18. 밑글의 '형사 제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처벌할 때 최적 억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 ② 어떤 행위에 대해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범죄 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어떤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에 관한 정보가 완전할수록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④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을 효율적인 범죄 억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1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사회가 최적 범죄 억제 비용을 투입했을 때의 범죄 수준은 Z₃이 된다.
- ② △△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 억제 비용은 Y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③ △△ 사회가 고려하는 형사 제재 정책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때의 사회적 총비용은 최적 범죄 억제 비용보다 작다.
- ④ △△ 사회가 범죄 수준을 Z₁보다 더 억제시키면 범죄 피해 비용이 줄어들어 사회적 총비용 역시 줄어든다.
- ⑤ △△ 사회가 Y₃에서 Y₂로 범죄 억제 비용을 줄인다면 범죄 수준은 Z₁에서 Z₂로 늘지만 범죄 억제 비용은 최적화된다.

2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대 제재가 4인 경우는 기대 제재가 5인 경우와 범죄 억제 효과가 동일하나 제재 비용은 더 작기 때문이다.
- ② 기대 제재가 4인 경우가 기대 제재가 5인 경우보다 범죄 억제 효과는 증가하고 제재 비용은 더 작기 때문이다.
- ③ 기대 제재가 4인 경우보다 기대 제재가 5인 경우가 B 부류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 ④ 기대 제재가 5인 경우에 비해 기대 제재가 4인 경우가 범죄 억제 효과와 제재 비용 모두 더 작기 때문이다.
- ⑤ 기대 제재가 5인 경우는 기대 제재가 4인 경우와 제재 비용은 동일하나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② ㉡: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 ③ ㉢: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바.
- ④ ㉣: 아끼어 줄임.
- ⑤ ㉤: 잘하는 일.

- 출전: 김일중 저.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 정답: 16.④ 17.④ 18.① 19.⑤ 20.① 21.②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떠한 법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법경제학은 효율을 그 잣대로 사용한다. 효율이란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인데, 후생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효율은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로 나눌 수 있다. 사후적 효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는 의미이고, 사전적 효율은 당사자의 사전적 유인책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절도를 예로 들어 보자. 갑과 을로만 이루어진 사회에서 갑의 물건을 을이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훔쳐서 사용했다. 물건은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되어,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해당 물건에 대한 갑과 을의 후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의 후생이 100원이고 을의 후생이 80원이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20원의 후생 감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이다. 절도의 문제점은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절도가 허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예측된다. 먼저 을의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절도 방지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 의욕의 저하와 절도 방지 비용 지출은 사회적 후생 증가에 ㉡ 기여하지 못한다. 즉 사전적 효율 관점에서 볼 때, 절도가 허용되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유인책이 생긴다.

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법 제도가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도산법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적 채권 추심*은 모두 금지되고 채권자는 오직 도산 절차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된다면 누구나 먼저 채권 추심을 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법 제도가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 기초하여 성립된 경우도 있다. 지식 재산권 관련 법에 의하면 소설이나 노래를 표절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복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면 복제를 할수록 사회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창작과 관련하여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창작 유인책이 ㉢ 제한되어 애초에 창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관련 법은 사전적 효율의 증진을 위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 채권 추심 :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일.

(나)

통계학에서 제1종 오류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제2종 오류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1,000원이고 각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따른 주의 비용, 사고 확률 등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총 사고 비용은 주의 비용과 기대 사고 비용

을 더한 값이다.

사고 방지 주의 (수준)	주의 비용 (원)	사고 확률 (%)	기대 사고 비용 (원)	총 사고 비용 (원)
0	0	6	60	60
1	30	2	20	50
2	60	1	10	70

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를 1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각각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가해자는 어느 수준의 주의를 선택할까? 가해자가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면 가해자는 8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6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이 둘을 곱한 값인 48원이다. 가해자가 주의를 1수준으로 높이면, 추가적으로 주의 비용 30원이 들지만, 기대 사고 비용 20원을 부담할 확률이 20%에 불과하므로 4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34원이다. 2수준의 주의의 경우, 주의 비용 60원에 2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1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62원이다. 결국 법원의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효율적인 1수준의 주의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항상 ㉣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이 모두 40%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가해자로서는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다.

위 사례에서 ㉤ 주목할 점은 가해자에게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관한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1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제2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 위 계산 과정을 따르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비용이 동일할 경우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법경제학의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법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유인책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법 제도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실태를, (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법 제도가 바람직하게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 (나) 모두 경제학적 측면에서 법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경제학적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바람직한 법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5.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도산법에서 개별적 채권 추심을 인정하면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 ② (가): 물건을 훔친 을이 갑보다 높은 후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법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 ③ (가): 법이 표절을 금지하는 이유는 창작자의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④ (나):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는 가해자의 사고 방지 주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⑤ (나):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여 과실 없음을 판결하는 것은 제2종 오류이다.

6.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와 B로만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A는 0원의 이익을 얻었고, B는 1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계약법은 A가 B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100원의 손해는 A가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B가 부담한다. 만약 A가 손해의 일부만 배상한다면 100원의 손해를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단, A와 B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동일한 후생을 갖는다.

- ①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은 100원보다 적어지겠군.
- ② 100원의 손해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A에게는 계약을 덜 파기하려는 유인책이 생기겠군.
- ③ 계약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겠군.
- ④ 계약법이 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쳐 계약이 이행됐다면 계약법은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군.
- ⑤ 계약법이 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계약법은 계약 미이행 사건 자체를 방지하지 못하는군.

7. (가)의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적정한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관한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 비용 3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한다.
- ③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 미만이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 비용 6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40%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 비용을 들어서 사고 확률을 낮추려는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에서 40%로 높아지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적정 주의 수준에 따라 행동할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8. ㉠을 <보기>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가해자의 사고 방지 주의 수준을 ㉡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0수준의 기대 사고 비용인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을 높이든가 1수준의 기대 사고 비용인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을 낮추면 된다.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고,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를 범할 확률이다. 당연히 큰 금액에 곱해지는 확률의 영향이 더 크므로 오류 확률 감소 비용이 동일하다면 제1종 오류 확률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	㉢	㉣
① 1수준	제1종 오류	제1종 오류	
② 1수준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③ 1수준	제2종 오류	제1종 오류	
④ 2수준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⑤ 2수준	제2종 오류	제1종 오류	

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함.
- ② ㉡: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 ③ ㉢: 정도, 수준, 능률 따위가 떨어져 낮아짐.
- ④ ㉣: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짐.
- ⑤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또는 그 시선.

◆ 14 LEET 언어이해 4~7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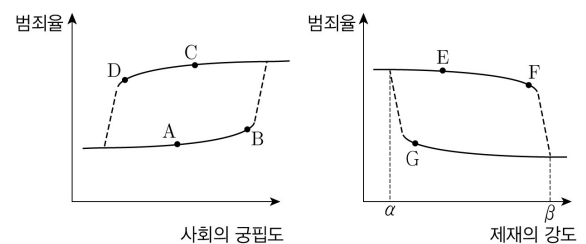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전이(相轉移)는 아주 많은 수의 입자로 구성된 물리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 같은 액체 상태의 물질에 열을 가하면, 그 물질은 밀도가 천천히 감소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갑자기 기체 상태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처럼 특정 조건에서 계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 상전이이다. 1기압하의 물이 0℃에서 열고 100℃에서 끓듯이 상전이는 특정한 조건에서, 즉 전이점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온도가 0℃ 아래로 내려가도 얼지 않고 계속 액체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 응결핵 구실을 할 불순물이 없는 경우 물이 어느점 아래에서도 어느 온도까지는 얼지 않고 이른바 과냉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어느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까지 고체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다. 우뭇가사리를 끓여서 만든 우무는 실제로 어느점과 녹는점이 뚜렷이 다르다. 액체 상태의 우무는 1기압에서 온도가 대략 40℃ 이하로 내려가면 응고하기 시작하는 반면, 고체 상태의 우무는 80℃가 되어야 녹는다. 우무 같은 물질의 이런 성질을 ‘이력 특성’이라고 부른다. 직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이력’이 현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어느점과 녹는점이 사실상 똑같이 0℃인 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많은 물질의 상전이 현상에서 이력 특성이 나타난다.

경제학자인 캠벨과 오머로드는 물리학 이론인 상전이 이론을 적용하여 범죄율의 변화 같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일종의 유비적 사고를 보여 준다. 그런데 사회가 수많은 개체들과 그것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계라는 점에서 수많은 입자들과 그것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물질계와 유사한 구조를 지녔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임의적인 유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결론을 낳을 만한 시도이다.

두 경제학자는 물질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온도와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듯이 한 사회의 범죄율이 대개 그 사회의 공핍의 정도와 범죄 제재의 강도라는 두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가정한다. 재산도 직장도 없는 빈곤한 구성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반면, 사회가 범죄를 엄중하게 제재할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공핍의 정도가 완화되거나 범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해서 그 사회의 범죄율이 곧장 감소하지는 않는다. 캠벨과 오머로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같은 특정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회도 높은 범죄율 상태와 낮은 범죄율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1>과 <그림 2>에서 각각 아래쪽의 실선은 낮은 범죄율 상태를 나타내고 위쪽의 실선은 높은 범죄율 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사회가 점 A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 사회는 낮은 범죄율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사회의 공핍도가 어느 정도 더 커져도 범죄율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핍이 더 심해져 B 지점에 이르면 공핍이 조금만 더 심화되어도 범죄율의 급격한 상승, 즉 그림의 점선 부분에 해당하는 상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또 사회가 C처럼 높은 범죄율 상태에 있을 경우 공핍의 정도가 완화되어도 범죄율은 완만하게 감소할 뿐이지만, D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경우 공핍의 정도가 조금만 줄어도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또 한 번의 상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범죄율의 변화는 이력 특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사회의 공평도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범죄율을 추정할 수 없고, 그것이 직전에 높은 범죄율 상태였는지 낮은 범죄율 상태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시한 모형이 실제 통계 자료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한 사회의 범죄 제재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공평도를 비롯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강도가 변하는 경우 범죄율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이력 특성을 포함한 상전이의 패턴을 나타낸다.

4. 위 글의 견해가 아닌 것은?

- ① 한 사회의 특성은 특정 조건에서는 다른 조건에서와 달리 급격하게 변화한다.
- ②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응용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유비적 사고의 타당성은 유비를 통해 연결되는 두 대상의 구조가 서로 유사할 때 강화된다.
- ④ 한 계의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는 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종류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 ⑤ 하나의 계가 드러내는 특성은 현재 그것을 제약하는 변수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것이 지나온 역사적 경로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다.

5.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상전이에서 이력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이 과냉각 상태의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
 ㄴ. 이력 특성을 갖는 물질은 온도와 압력을 알아도 그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ㄷ.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상전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 ④ ㄱ, ㄷ ⑤ ㄱ, ㄴ, ㄷ

6. <그림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E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강화되더라도 범죄율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 ② F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하면 범죄율은 급감할 것이다.
- ③ G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제재가 조금 더 약해질 경우 범죄율이 급증할 소지가 있다.
- ④ α 는 높은 범죄율 사회를 낮은 범죄율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재의 강도에 해당한다.
- ⑤ 범죄에 β 보다 더 강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에서 범죄율은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7. <보기>의 ㉠을 반박할 근거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캠프와 오머로드의 모형으로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회 현상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되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 예를 들어 출산율만 해도 범죄율과는 전혀 다른 문제지.

B: 아니, 출산율의 변화도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자녀 양육 수당이나 다자녀 세금 감면 같은 경제적 유인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교육비 부담 같은 경제적 압박의 심화는 출산율을 감소시키지. 중요한 것은, ㉠ 출산율의 이런 변화에서도 이력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이야.

- ① 실제로 어느 고출산율 사회에서 정부가 육아 지원을 30%나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 ② 저출산율 사회를 탈피하게 하는 육아 지원의 규모가 고출산율 사회에서 저출산율 사회로 이행하는 시점의 육아 지원 규모와 일치하였다.
- ③ 정부의 육아 보조금 같은 긍정적 요인보다 양육비와 교육비의 증가 같은 부담 요인이 출산율에 훨씬 더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④ 자녀 양육 수당의 증액은 출산율 변화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던 데 반하여 다자녀 세금 감면 혜택의 강화는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⑤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증대가 출산율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변화를 야기한 교육비 수준은 명확한 금액으로 제시하기 어려웠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나 투표에 대한 연구를 정치학의 분야로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선거나 투표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공정하면서도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이 무엇인지를 수학적 논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현행 ㉠다수결 제도는 두 명의 후보만을 놓고 선거를 하는 경우엔 완벽하게 민의를 반영하는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하지만 후보의 숫자가 셋 또는 그 이상이 되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라는 세 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왔다고 하자. 갑은 국민의 34%에게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66%의 국민들은 갑을 싫어한다. 하지만 세 후보를 놓고 다수결로 투표를 해보면 갑, 을, 병이 각각 34%, 33%, 33%를 획득하여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갑이 선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보아도 한 측은 단일 후보가 나온 반면 다른 측은 두 후보가 나와서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다. 그럼 세 명 이상의 후보를 놓고 투표할 때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없을까?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비교투표 제도가 있다.

조합비교투표 제도는 각 투표자가 단 한 명의 이름만 투표지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 중에서 자신이 누구를 선호하며, 을과 병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고, 갑과 병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적는다. 이렇게 후보들을 둘씩 붙여서 누가 이기는지 비교하여 1 대 1 대결에서 가장 많이 이긴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법이다. 실제 투표 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각 후보의 이름 옆에 자신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등수를 적어 넣으면 컴퓨터가 금방 둘씩 짝을 지어서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점수투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각 유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게 3점을 주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2점, 세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1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얻은 각 후보의 점수를 합한 후 가장 높은 점수의 합을 얻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법으로, 이는 현행 다수결 제도보다는 뛰어난 투표 방식이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결선투표 제도는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1, 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 러시아 등의 선거에서 사용되는데, 현행 다수결 제도보다는 우수한 면이 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투표 방법보다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투표가 두 번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용도 많이 든다.

39. 위 글의 글쓴이가 제기한 핵심적인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투표의 다양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② 결선투표 제도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 ③ 다수결 제도는 과연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 ④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선거에서 수학적 논리를 사용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40. <보기>의 상황에 [A]와 [B]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각각 당선된 사람은?

—<보 기>—

민수네 반 학생 40명이 반장 선거를 하였다. 학급 학생 모두에게 투표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세 명의 반장 후보 순이, 철수, 영희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적게 하였다. 투표 용지를 모아 개표하니 아래와 같았다.

투표 용지	투표 용지	투표 용지
1위 순이	1위 철수	1위 영희
2위 철수	2위 영희	2위 철수
3위 영희	3위 순이	3위 순이
총 17표	총 13표	총 10표

- ① 순이, 철수 ② 순이, 영희 ③ 영희, 철수
- ④ 영희, 순이 ⑤ 철수, 영희

41.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 ㄱ. 후보가 셋 이상일 경우, ㉠에 비해 ㉤가 더 합리적이다.
 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가 ㉤보다 합리적이다.
 ㄷ. ㉠가 ㉤보다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다.
 ㄹ. 후보자가 두 명일 경우, ㉠가 가장 이상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2. <보기>는 ㉠의 단어 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자동사인 ‘당선되다’에 ‘-시키다’가 결합됨으로써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가 되며, 사동의 의미를 더한다.

- ① 교육하다 - 교육시키다 ② 반영되다 - 반영시키다
- ③ 결혼하다 - 결혼시키다 ④ 축소되다 - 축소시키다
- ⑤ 굴복하다 - 굴복시키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심리학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대별된다. 먼저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은 유권자 대부분이 일관된 이념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투표 선택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그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곧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혈연, 지연 등에 따른 사회 집단에 대해 지니게 되는 심리적 일체감처럼 유권자들도 특정 정당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따지기보다 정당 일체감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합리적 선택 이론은 유권자를 정당이 제시한 이념이 자신의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그 효용을 계산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공간 이론은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으로 나뉜다.

초기의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은 유권자의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이념 공간을 일차원 공간인 선으로 표시하고, 보수적 유권자 X, 진보 정당 A, 보수 정당 B의 이념적 위치를 그 선에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근접 이론은 X와 A, B 간의 이념 거리를 각각 $|X-A|$ 와 $|X-B|$ 로 계산한 다음, 만약 X와 A의 이념 거리가 X와 B의 경우보다 더 가깝다면 X는 A에 더 큰 효용을 느끼고 투표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유권자 분포의 중간 지점인 중위 유권자의 위치가 양당의 선거 경쟁에서 득표 최대화 지점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X가 이념 거리가 더 가깝다는 것만으로 자신과 이념이 다른 A를 지지할까? 이에 대해 방향 이론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이념 원점을 상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의 이념이 유권자의 이념과 같은 방향이되 이념 원점에서 더 먼 쪽에 위치할수록 그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이 증가하며, 반대로 정당의 이념이 유권자의 이념과 다른 방향일 경우에는 효용이 감소한다고 본다. 가령 이념 원점이 5라고 한다면, X의 A와 B에 대한 효용은 각각 $-|5-X| \times |5-A|$ 와 $|5-X| \times |5-B|$ 로 계산되는데, 이때 X는 이념 거리로는 비록 A가 가깝다 할지라도 B에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방향 이론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은 그 정당이 유권자와 같은 이념 방향의 극단에 있을 때 최대화된다는 것이다.

두 이론은 이념에 기초한 효용 계산을 통해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의 ‘어리석은 유권자’ 가설을 비판했지만 한계도 있었다. 근접 이론은 미국의 정당들이 실제 중위 유권자의 지점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방향 이론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념적 극단에 있는 정당이 실제로 수권한 경우가 드물다는 비판에 각각 직면했다. 이에 근접 이론은 정당이 정당 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정당 일체자)들로부터 멀어질 경우 지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중위로부터 다소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고 이론적 틀을 보완했다. 또 방향 이론은 유권자들이 심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념 범위인 관용 경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당이 관용 경계 밖에 위치하면 오히려 유권자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이론에 반영했다.

이러한 후기 공간 이론의 발전은 이념적 중위나 극단을 득표 최대화 지점으로 보았던 초기 공간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려 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는 정당 일체감이나 그 밖의 심리학적 개념들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공간 이론은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비판적으로 전망했던 ‘세련된 유권자’ 가설을 무리 없이 입증해 왔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이념에 기초해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

한편 공간 이론의 두 이론은 유권자의 효용 계산과 정당의 득표 최대화 예측에서 이론적 경쟁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설명력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의회 선거를 예로 들면, 근접 이론은 미국처럼 ㉠ 양당제 아래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선거를 더 잘 설명해 왔다. 반면에 방향 이론은 유럽 국가들처럼 ㉡ 다당제 아래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선거를 더 잘 설명해 왔다. 한 연구는 영국처럼 ㉢ 다당제 아래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여당에 대해 기대하는 효용은 근접 이론이 더 잘 설명하고, 유권자가 야당에 대해 기대하는 효용은 방향 이론이 더 잘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 환경에 따라 정당들의 득표 최대화 전략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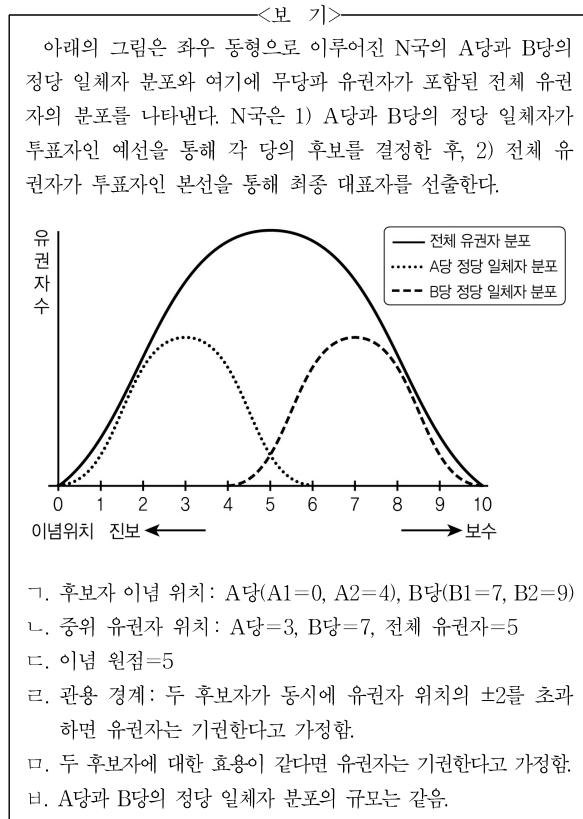
9. 위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이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 ㉡ 공간 이론은 유권자와 정당 간의 이념 거리를 통해 효용을 계산하여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설명하였다.
- ㉢ 후기 공간 이론의 등장으로 득표 최대화에 대한 초기의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 간의 이견이 해소되었다.
- ㉣ 후기 공간 이론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념의 비중이 커졌다.
- ㉤ 후기 공간 이론은 정당 일체감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세련된 유권자 가설을 입증했다.

10. ㉠~㉤에서 득표 최대화를 위한 정당의 선거 전략을 공간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 초기 근접 이론은 ㉠에서 지지를 하락을 경험한 여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 ㉡ 후기 근접 이론은 ㉡에서 정당 일체자의 이탈을 우려한 야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하지 못함을 설명할 수 있다.
- ㉢ 후기 방향 이론은 ㉢에서 정당 일체자의 이탈을 우려한 여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 ㉣ 초기 근접 이론은 ㉣에서 중도적 유권자의 이탈을 우려한 여당이 중위 유권자의 위치로 이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 ㉤ 후기 방향 이론은 ㉤에서 중도적 유권자의 관용 경계를 의식한 야당이 이념적 극단 위치로 이동하지 못함을 설명할 수 있다.

11. <보기>의 선거 상황을 가정하여 위 글의 이론들을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기 근접 이론은 B1이 예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② 초기 근접 이론은 A2가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③ 초기 방향 이론은 본선에서 승자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④ 후기 근접 이론은 A2가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⑤ 후기 방향 이론은 A1이 본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